

李 정부 첫 예산 국감… 여야, ‘민생’ vs ‘국정실정’ 정면충돌

각 상임위주 주요 현안 두고 격돌
조희대,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반도체·대미투자 프로젝트 등 쟁점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3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된 각 부처의 사업을 점검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들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내란 척결’ 공세를 퍼부었던 것에 이어, 이젠 ‘민생’에 방점을 찍고 국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6일 국회에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당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매일 오후 1시30분에 국정감사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감 대응을 통해 민생을 지켜내고 국민의힘의 선 넘는 공세를 맞대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3일 부산 부산진구 카페 산애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청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실정을 이번 국정감사에 패키지로 한 데 모아 수면 위로 부상시킬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갖가지 논란거리가 누적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소수야당’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실천정당’으로 변모를 꾀한다.

국민의힘도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의 체제로 전환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1순위 과제는 ‘현지 조사, 진상 규명’ 즉,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초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법제사법위원회다. 조대법관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여당 간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삼권 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예우 차원에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과 만나 조 대법원장인 국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점검을 두고 여야가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처를 상대로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지고 원금 회수가 가능한 지 따져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엔 김현치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야당의 요구에도 증인 채택되지 않으면서 파행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나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국감장으로 불러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융 정책 및 제도, 금융권을 다루는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주요 현안으로 삼는 가운데, 야당이 즐기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결국 나오지 않게 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위에선 ETF 사태 관련 증인 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며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방위원회에서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및 군 추후 조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및 부동산 공급 계획 점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국힘 “李 재판 재개”… 집회 열고 대여 공세

송레문 앞서 정권 심판 장외집회
정부 사법·안보·경제 정책 비판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공허한 함성뿐”이라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 정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맞받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송레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법·안보·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대여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이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없애고 법원은 길들이고, 본인 재판은 지우려고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놓을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도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정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와 치안 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며 “(북한) 김정인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강통’에 비유하며 출범 준비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 심지어 수사관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한마디로 ‘강통’ 중수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앤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수사 뺑뺑이를 돌다 끝날 판”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농지·금융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집을, 농지 조사로 국민의 땅을, 금융 정책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다”며 “이것은 정치가 아닌 ‘악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이 3일 서울 송레문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생을 외면한 지지층 결집 행보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봉천 계단, 지난 1일 중수청 앞에 이어 열흘 남짓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거리로 나갔다”며 “산적한 현안과 엄중한 민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외에서 고함치고 복치

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로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틈만 나면 거리에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중앙 윤리위원회를 흥위병 삼아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극단주의 경계”… 검찰개혁 ‘정면돌파’

검찰개혁 논란에 연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다고 재차 설명했다. 범여권 지지층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정면 돌파를 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올렸다. 우선 검찰개혁의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든 데 대해서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하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방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에 올린 글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냐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결을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4일) 밤 이 대통령은 X에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흑색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국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나선 것은 강경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 인선 장고

국정감사 뒤 교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2주째 고심 중이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조직 장악력 및 정부각각, 여론 지지층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감이 마무리되는 11월까지의 강 실장이 시한부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5일 청와대 및 정치권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한 강 실장의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에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3선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안착에 역할을 한 강 실장의 대체자를 찾기 쉽지는 않다는 평가다. 강 실장은 초기 청와대 근무체제와 기강을 다잡으며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수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찾아 에너지 공급망 활동을 펼치는 등 실무에서도 성과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김영진·천준호·한준호 의원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서예진 기자